

#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과 미래형 전자저널 컨소시엄 운영모형 : KESLI를 중심으로\*

## A Business Model for Electronic Journal Licensing Consortia in an Emerging Scholarly Communication Environment : The KESLI Case

이 소 연\*\*  
So-Yeon Lee

### 차 례

- |                |            |
|----------------|------------|
| 1. 서 론         | 4. 추진체계 정비 |
| 2. 단기적 대응기능 강화 | 5. 결 론     |
| 3. 장기적 변화주도 전략 | • 참고문헌     |

### 초 록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자저널 컨소시엄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즉각적 전략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 변화주도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저널 컨소시엄인 KESLI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컨소시엄 운영모형을 제안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미래형 컨소시엄 운영모형은 단기적 대응기능 강화 전략, 장기적 변화주도 전략, 그리고 추진 체계를 세 축으로 하고 있다.

### 키 워 드

학술정보, 전자저널, 컨소시엄, 운영모형, KESLI, 라이선스

\* 이 논문은 2007년도 KISTI가 지원한 연구용역 보고서 "KESLI 효율성 분석을 통한 미래형 컨소시엄 운영모형 개발연구"[K-07-IP-01-06P-7]의 내용 중 6장 '전자저널 국가 컨소시엄의 미래 운영모형'을 수정·보완한 것임.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Full-time lecture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Duksung Women's University, soyeon@duksung.ac.kr)

• 논문접수일자 : 2008년 2월 14일

• 게재확정일자 : 2008년 3월 13일

## ABSTRACT

As scholarly information environment rapidly changes, library consortia for electronic journal licensing come to require strategies to better address service needs of member institutions as well as to take parts in more progressive initiativ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re future-oriented and progressive business model for electronic journal licensing consortia. The model is based on three pillar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immediate needs; long-term strategies for leading change; and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 KEYWORDS

Scholarly Information, Electronic Journal, Library Consortium, Business Model, KESLI, Licensing

## 1. 서론

학술지는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자원이다. 특히 과학기술 및 의학 분야(STM :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의 학술지는 국가경쟁력 신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술지가 전달하는 고급 콘텐츠가 정보기술과 만나 탄생한 전자저널은 불과 십여 년 전에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다양한 이용편이성 기능과 함께 전 세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과 실험실의 일상을 변모시켰다. 특히 아직 지식수입국의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국제경

쟁력은 해외학술저널에 대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접근을 확대하고 이용을 지원하는 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한편 소유로부터 접근으로 정보 컬렉션 구축의 패러다임이 변환함에 따라 전 세계의 학술 및 연구도서관은 까다롭고 복잡한 라이선싱 구매절차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이나 국가별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전자정보 라이선스 구매를 위한 도서관 컨소시엄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컨소시엄으로는 KESLI, KERIS, 그리고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컨소시엄이 있다.<sup>1)</sup>

그 중 KESLI는 2000년 대학, 연구소, 병

---

1) KERIS의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KERIS ACE : Academic Library Consortia on Electronic Resources, 이하 KERIS)은 KERIS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주로 대학도서관의 해외DB 라이선스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KMLA :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이하 의도협) 컨소시엄은 의학 분야 전자저널 공동구매를 위하여 의과대학 및 병원 도서관이 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원, 기업체 등 160개 기관을 시작으로, 2007년 말 현재 362개 기관<sup>2)</sup>으로 참여기관 수가 확대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 컨소시엄이다. KERIS 컨소시엄이 경영/경제나 인문 과학 전자정보의 비중이 큰 데 비하여, KESLI 컨소시엄은 자연과학이나 공학기술 분야 전자저널에 대한 라이선스 구독을 지원하는 차이점을 갖는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참여기관의 규모로 보나, 해외 전자정보 수요가 높은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면에서나 우리나라의 학술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KESLI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KESLI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하 참여기관) 입장에서는 거대출판사 등의 공급자를 일대일로 대응하여 협상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전자저널 라이선스를 구독하는 데 있어서 정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연구 및 전문도서관에게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저널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힘의 균형이 날이 갈수록 왜곡되어 가면서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에 대하여 갖게 되는 기대와 불만의 수준도 폭증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도서관 예산은 갈수록 감축되는 데 비하여 공급자는 가파르게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데 따른 구매력 약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요청을 들 수 있다. 특히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자 측에서 영어권 국가의 도서관에 비해 국내 도서관을 만만

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컨소시엄 운영주체에 대한 불만과 공급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런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수요자와 공급자 간 힘의 균형이 왜곡된 전자저널 시장으로 대표되는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기본구조를 재편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라이선스 유지를 중지하고 건당 이용료 지불 체제로 전환하여, 컨소시엄을 통한 번들 구매를 탈피할 것을 선언한 도서관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도서관은 그 선언을 근거로 하여 라이선스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어내었거나, 건당 이용료 지불체제를 시범운영하여, 그 비용효과를 라이선스 구독의 경우와 비교할 예정인 것이다.

한편,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나 영국의 학술연구 지원기관인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캐나다의 CRKN(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등 각국의 도서관 및 전자정보 서비스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전자저널 라이선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구매 협상 과정에서 도서관/컨소시엄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표준 라이선스(model license)를 개

2) 2007년 12월 현재, KESLI 참여기관 분포는 대학이 162기관, 연구소가 71기관, 기업이 61기관, 의료기관이 44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24기관이다. [<http://www.kesli.org/index.html>]

발·보급하는 것은 이들 기관이 전자저널을 포함한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재편성하고자 하는 시도 중 소극적 노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더 적극적인 시도로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자저널 콘텐츠의 가장 우선적인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기도 한 연구자가 전자저널에 수록한 학술논문의 전자초고(e-prints)를 소속기관의 레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y)에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공개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전자저널을 번들로 구매하도록 강요받는 관행을 대체하기 위한 개별 구독모형이나 주제별 세분화 저널 패키지 구독모형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전자저널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노력 등이 전자저널 라이선스 구매를 둘러싸고 논의 중이거나 실험 중인 다양한 대안의 예가 될 것이다.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이렇게 급변함에 따라 KESLI를 비롯한 컨소시엄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즉각적 전략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 변화주도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서관 컨소시엄인 KESLI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KESLI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수요와 기대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검토하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특히 그간 이루어진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수준의 내실뿐 아니라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학술연구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미래지향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KESLI 내외의 공통된 인식이 이 연구의 촉발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KESLI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응사례를 수집·분석함으로써 KESLI 컨소시엄을 위한 미래형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이소연 등 2007: 이하 KESLI 연구)를 지원하였다.

KESLI 연구 전반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의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다. KESLI 출범 이래 KESLI가 제공해 온 서비스의 효율성과 수요를 조사하는 첫 번째 연구였으므로, 좁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전반적인 쟁점사항을 드러내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았다. 즉 전자저널을 포함하여 학술커뮤니케이션 전반의 쟁점사항을 모두 드러내어 미래지향적 운영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KESLI 연구는 4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참여기관이 KESLI를 통해 구독하는 전자저널의 이용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KESLI의 효율성을 점검하였다. 두 번째, 참여기관 전자저널 실무자와 전자저널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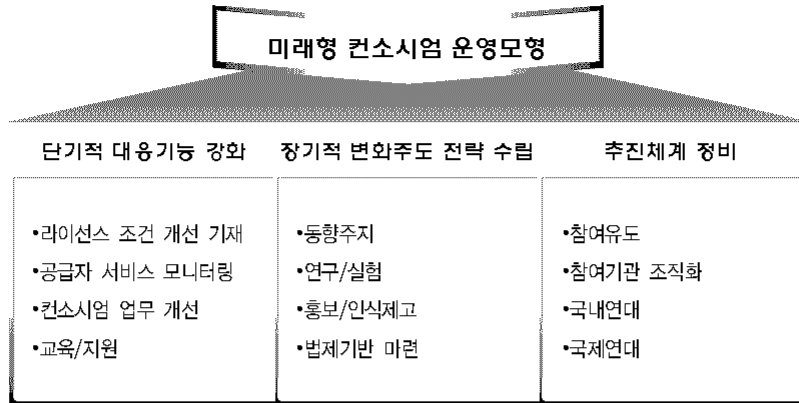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범위

사업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FGI(Focused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담)를 6회에 걸쳐 수행함으로써 전자저널 라이선스 구독을 위한 컨소시엄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대와 수요를 조사(전혜영, 박수희 2008)하였다. 셋째,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저널 콘텐츠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동향과 함께 국내외 컨소시엄 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전반적인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쟁점과 동향을 파악(김성진, 정은경, 한민혜 2008)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장단기 운영모형을 개발하

장기적 변화주도 전략 수립, 준비가 이 연구가 제안하는 운영모형의 세 축이다.

당장 드러난 문제들에 즉각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는 라이선스 개발, 공급자 서비스 모라이선스 및 컨소시엄과 편집 배포, 그리고 교육 및 지원을 제안할 것이다. 장기적 변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뿐 아니라 논의나 오픈 액세스 등 전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거



〈그림 2〉 미래형 컨소시엄 운영모형

상으로 정보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을 홍보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홍보 및 인식제고,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최종 수요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평가와 계약법 등 전자저널 라이선스 및 컨소시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를 개선하는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참여 확대, 참여기관 조직화, 국내 관련 기구와의 연대, 국제기구 및 조직과의 연대 등 다양한 층위에서 정비할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 2. 단기적 대응기능 강화

KESLI의 미래 운영모형에서 전자저널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주로 FGI 결과에 기반하여 수립

되었다. 6회에 걸쳐 진행된 FGI 중 5회의 FGI는 다양한 관종과 규모의 도서관에서 전자저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들이 실무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제안을 수집할 수 있었다. 5회의 FGI에 걸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매년 가파른 각도로 인상되는 전자저널 구독가격에 대응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였다.

KESLI 참여기관 모두에 공통된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가격인상 문제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제한된 예산의 압박을 받으면서 기존 구독분을 유지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 온 도서관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FGI 참여자들은 KESLI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가격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또 전자저널 콘텐츠 공급

자가 전자저널 가격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받는 서비스의 품질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별 참여기관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해외 전자저널을 구독하기 위해 지불하는 막대한 비용에 걸 맞는 품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가격인상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확보에 대한 KESLI 참여기관의 즉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은 다섯 가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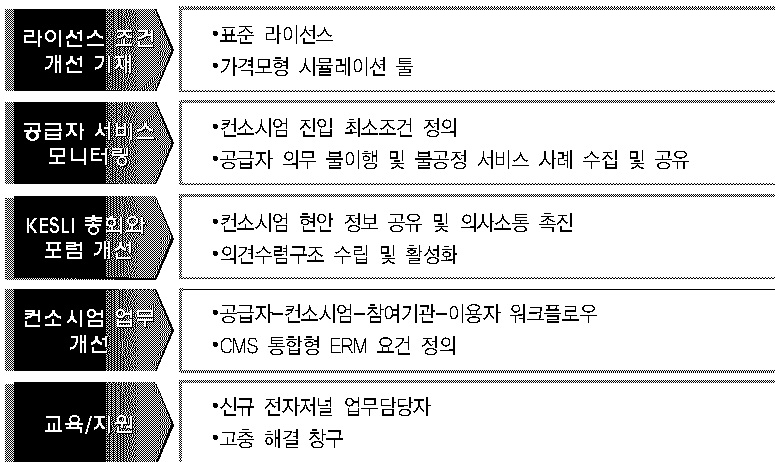
## 2.1 라이선스 조건 개선 기재 개발

FGI 참여자들은 도서관에 불리한 여러 가

지 라이선스 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표준 라이선스와 다양한 가격모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이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당장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1.1 표준 라이선스

현행 라이선스 계약서는 관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FGI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분출한 두드러진 불만의 대상이었다. ‘라이선스 계약서야말로 KESLI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다. 현재의 계약서는 도서관이 양자 간 계약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공급자가 컨소시엄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로 우리말로 작성한 라이선스 협약서 제공을 명시하



<그림 3> 단기적 대응기능

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현재는 우리말로 작성된 라이선스 협약서를 제공받는 일이 거의 없으며, 번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번역기 수준에 그쳐 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또 라이선스 협약서에 포함된 전문법을 용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것도 참여기관의 전자저널 구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이선스 협약을 갱신할 때에 새로운 계약서의 수록조건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계약기간 시작된 후에야 라이선스 협약서를 받게 되는 일이 빈번하며, 심한 경우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12월에야 받은 적도 있다는 도서관도 있었다.

또 도서관의 책무만 열거되어 있을 뿐 공급자의 책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계약서로는 도서관이 지불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출판사가 아니라 대행사가 개입하는 컨소시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기간 동안 대행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공급자 의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한편, 표준 라이선스를 개발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모든 공급자가 이러한 기본요건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소시엄 신규 진입 공급자 뿐 아니라 기존 공급자에게도 표준 라이선스 채택 여부를 기준으

로 심사하는 절차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기본 의무사항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계약 기간 동안에는 수록 저널을 변동할 수 없음, 또는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정의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나 삭제, 변경이 발생하기 전 어느 정해진 시점에 미리 통지
- COUNTER 등 표준 형식을 준수하여 생산, 축적한 이용통계를 KESLI와 구독기관에게 제공
- 상호대차를 위한 출력 허용
- 구독료를 인상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

특히 대규모 대학도서관 실무자들이 모인 FGI에서는 전자저널 도입 이전에 구독하던 인쇄저널 필수구독 조건을 강요받는 현재의 라이선스 관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자저널을 도입하기 이전에 구독해 오던 인쇄저널에 대한 구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장서를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적극적인 수서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도서관의 입지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선스 협약에 포함된 조항들이 국내법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사급하다. 현재의 라이선스 협약은 참여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규제환경과는 무관하게 작성



된 것이다. 꼼꼼하게 확인할 여유나 절차가 없이 도서관 측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국제법을 따른다'는 원칙의 준수를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실정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 참여기관 경영자와 실무자, 또는 컨소시엄 담당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FGI 참석자는 모기관 구매부서는 한국에서의 보편적인 계약관행을 따르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데 비해 공급자는 '국제 계약에 준하여' 영문 라이선스와 인보이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요청 시 조직 내부에서 곤란을 겪는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국립대학이나 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도서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을 따르지 않는 계약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부문의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세무신고나 외환관리법 등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를 컨소시엄 차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체가 모호한 '국제법'이 아니라 CRKN, NERL, JISC 등이 개발하여 보급 중인 표준 라이선스의 기본 요건과 국내 규제 환경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KESLI 표준 라이선스를 개발하는 것은 KESLI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표준 라이선스에는 위에서 언급한 조항들 이외에도 영어권 국가의 관행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영어자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학부생도 FTE에 포함시켜 구독가격을 산정할 것인지,

허용되는 이용과 제한되는 이용을 어떻게 정의할지 등 라이선스에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2.1.2 가격모형 시뮬레이션 도구

앞서 설명한 표준 라이선스는 출판사와 대학 등 전자저널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라이선스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재이다. 한편, 모든 참여기관에 공통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가격산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가격모형을 실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독을 희망하는 저널에 대한 다양한 구독방식을 검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번들 구매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가격모형이 거론(Rightscom 2005)되고는 있다. 그러나 건당구매나 종량제, 그리고 주제별 패키지 등 이러한 새로운 구독모형은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급자도 도서관도 선택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 측에서 내년도 예산을 예측하거나, 공급자 측에서 수입을 예상할 수 없다면 어떤 참신한 가격모형도 양측 모두 선불리 감당할 수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영국의 Rightscom 사례(2005)는 연구자 수와 기사이용 건수 등 각 모형에 수반되는 주요 변수를 입력하여 다양한 구독모형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 사례

다. 이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컨소시엄 전체 차원에서 각 모형의 타당성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정련한다면 컨소시엄 단위에서 적용해 볼 만한 가격모형을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개별 도서관에서 필요에 따라 실정에 맞는 구독모형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저널 수서도구로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 2.2 공급자 서비스 모니터링

합리적인 가격모형을 선택하여, 도서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 라이선스에 따라 협약을 맺었다고 하여도 공급자가 구독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GI에서는 출판사와 대행사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수차례 보고 되었고 출판사와 대행사 사이의 역학관계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례까지 청취할 수 있었다.<sup>3)</sup>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토로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

급자의 서비스를 감시하고 통제할 기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KESLI 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가장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공급자가 컨소시엄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조건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여러 FGI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제까지는 거의 모든 새로운 공급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정서가 지배적이어서 공급자의 KESLI 컨소시엄 진입이 쉬웠던 게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시장에 진입한 공급자나 대행사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확보한 고객이 평가와 점검을 등한시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동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진입조건을 정의하고, 이 조건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2.3 KESLI 총회와 포럼 개선

참여기관이 주체가 되는 컨소시엄으로 KESLI

3)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FGI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들이 면담을 기회로 하여 각자가 겪었던 불만스러운 서비스 사례를 교환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각자가 독자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인쇄저널 구독 조건을 강요받는 경우나 IP가 같은 경우에도 동일 기관의 여러 분관에서 별도로 구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등 참여기관 담당자가 불공정 거래 저축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의사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미 참여기관 전체를 위한 정기적 모임의 장으로 KESLI 총회와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기관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공급자에게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장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FGI에서 드러난 문제점이었다. ‘물건을 갖다 파는 장만 펼쳐주는 컨소시엄’이나 ‘총회가 옛날에는 진짜 우리 참여기관들의 모임이었는데 KESLI 주관기관인 KISTI의 큰 행사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평가를 청취할 수 있었다. 또 ‘(공급자) 세미나에 가면 들을 수 있고 여차하면 불러 시연해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를 굳이 2박3일이란 시간동안 계속 듣는다는 게 좀 많이 답답했다’는 불만도 있었다. 즉 ‘업체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KESLI 참여기관들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추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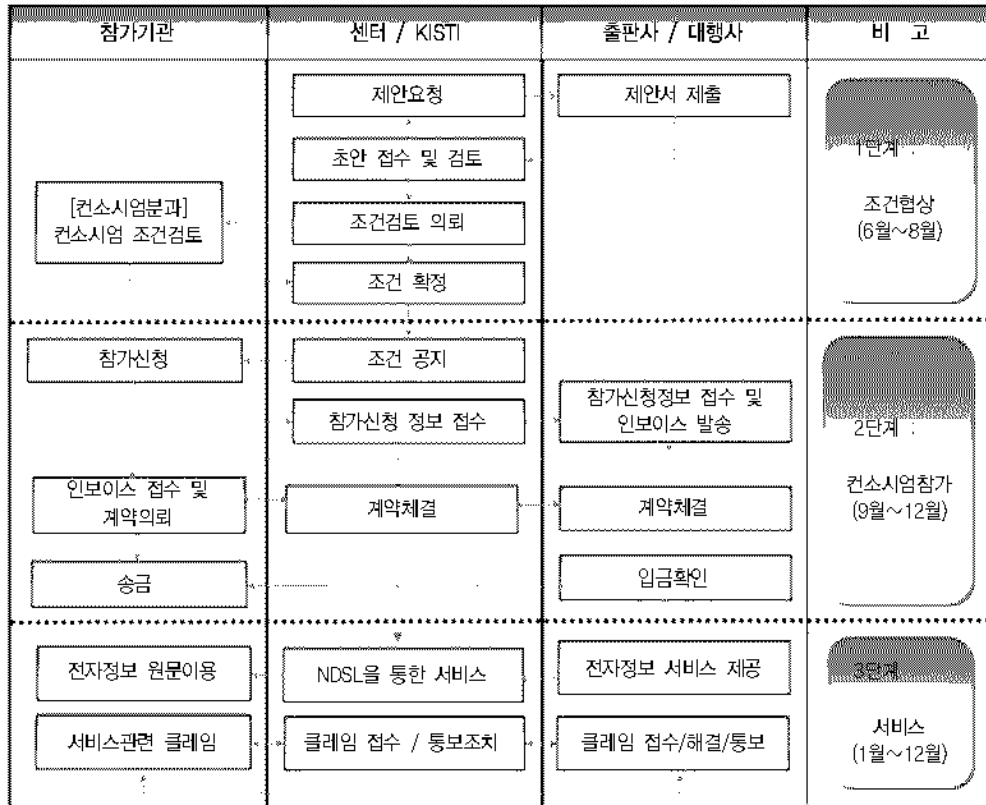
물론 이를 위해서는, KESLI가 주도하고 참여기관이 수동적으로 이를 따르는 이제까지와 같은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집단적 학습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상충하는 이해를 가진 다양한 참여기관 그룹이 총회와 포럼의 성격을 정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KESLI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근본적 논의의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적 미래 운영모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와 포럼 등의 의견수렴 구조를 수립하여 활성화하는 것은 다른 어떤 전략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총회와 포럼을 통해 KESLI 컨소시엄 운영 현안에 관한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나눌 필요도 있다. 참여기관이 KESLI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FGI 참여자는 NDAC이나 KAIST에서 KISTI로 KESLI의 소속이 변화된 이후의 운영 현황 등 KESLI 컨소시엄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KESLI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참여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KESLI 운영진이나 다른 참여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적극적인 참여는 고사하고 KESLI와 유리될 수밖에 없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기관 실무자가 KESLI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KESLI 운영에 관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와 총회와 포럼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 2.4 컨소시엄 업무개선

KESLI 실무자들의 운영업무와 참여기관 실무자들의 전자저널 구독업무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과제로는 공급자에서 최종수요자에 이르는 전자저널 관리업무의 위



〈그림 4〉 KESLI 업무흐름

크플로우를 재정의하는 전략이 있다. 전자저널 라이선싱 업무는 가장 단순한 형태라 하더라도 생산자-공급자-대행사-컨소시엄-참여기관-최종이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주체와 시스템이 개입하는 복잡한 프로세스이다. 다음의 〈그림 4〉<sup>4)</sup>는 컨소시엄 측면에서의 전자저널 구독업무를 도식화한 것이다.

위의 그림이 보이는 바와 같이, KESLI 업무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조건협상 단계는 출판사나 대행사

등이 컨소시엄에 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참여기관 대표로 이루어진 조건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건을 확정하기까지를 말한다. 다음은 확정된 조건을 공지하여 참가신청을 받아 송금과 입금확인 과정을 거쳐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컨소시엄 참가단계가 있다. 마지막 단계는 NDSL을 통한 서비스 등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관련 클레임을 접수하여 해결/통보하는 서비스 단계이다. 이 전체과정에서 모든 행위주체는 각자

4) 출처 : KESLI 홈페이지 〈<http://www.kesli.or.kr/kesliindex.html>〉. [인용 2008. 2. 13].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행위주체 차원에서조차 여러 부서와 단계와 시스템을 거치기도 한다. 구독하기로 정한 전자저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부결재를 받기까지 도서관 신청-구매와 검토-기획과 승인-관리와 확인-경리와 지불의 5단계를 거쳐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사이 공급자와 컨소시엄 또는 공급자와 참여기관 간 상호작용 과정 어디에선가 데이터의 흐름이 끊기거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전달됨으로 인해 혼돈과 불편이 초래되기 쉽다. 그러므로 공급자로부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 콘텐츠와 메타데이터가 끊김없이(seamless) 전달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종이용자를 위한 전자저널의 종별, 호별, 기사별 검색 메타데이터나 참여기관의 전자저널 관리자를 위한 개별 전자저널이나 번들의 구독가격, 조건, 검색 플랫폼에 대한 관리용 메타데이터, 그리고 공급자에게 필요한 사용자 인증 메타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만 이러한 혼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저널 구독정보 표준화 프로토콜인 ONIX 나 이용통계를 자동추출(harvesting)하기 위한 프로토콜 NISO/SUSHI, 그리고 이용통계 교환을 위한 COUNTER 등을 준수하는 컨소시엄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개발한 컨소시엄 시스템 및 공급자 시스템과 호환하여 관리 및 검색용 데이터를 끊임 없이 반입할 수 있는 ERM 설계요건 목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컨소시엄 관리시스템과 참여기관을 위한 ERM 설계요건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자저널 콘텐츠 생산자에서 최종이용자까지 이르는 워크플로우 전반에 대한 세심한 분석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발한 요건목록은 참여기관이 전자도서관시스템이나 전자자원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전자저널 관리 모듈을 포함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급자가 이용통계와 구독조건 및 수록저널 정보 등을 관련표준을 준수하여 생성하여 제공할 것을 표준라이선스에 명시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략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 2.5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전자저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연속간행물 업무는 도서관 업무 중 가장 복잡한 업무 중 하나였다. 특히 전자저널 라이선스 업무는 장서개발, 예산, 검색과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전문이용자까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업무이기도 하다. 도서관 근무연한이 상당히 되어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업무이자 영어 실력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

변하는 사회 및 조직 환경에서는 도서관 업무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져서 과거처럼 정기간행물이나 분류 등 한 가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서를 그 업무에만 배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전자저널 실무경험이 없는 채 라이선싱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자저널 담당사서의 잦은 교체로 인해 컨소시엄 참여 및 전자저널 라이선싱 업무의 백락에 대한 이해가 단절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도서관이나 연구소 도서관에서보다 업무전환 빈도가 더 잦은 대규모 대학도서관일수록 KESLI에 대한 주인의식이나 참여의지가 낮은 문제로 연결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기관과 실무자가 주도하는 KESLI가 되기 위해서도, 참여기관의 라이선싱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신규 전자저널 업무담당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은 교육/지원 서비스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KESLI 서비스에 대한 참여기관의 만족도를 단기간 내에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는 전략으로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콜센터 등 고충해결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저널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신규 담당자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곤경에 처한 기존 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 창구를 마련하여 참여기관 담당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면 KESLI가 참여기관보

다는 공급자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불만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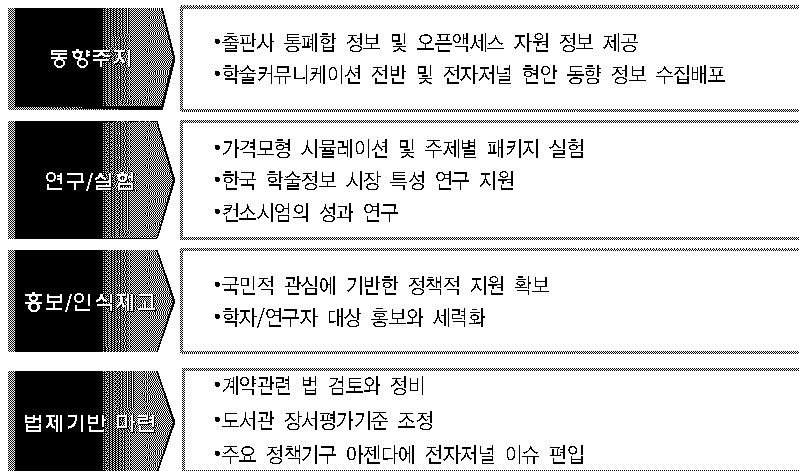
KESLI는 2002년 이래 매년 2박 3일의 일정으로, 엄선된 전자저널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초빙한 우수한 강사와 함께 영어로 진행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그리고 전자저널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 마케팅을 주제로 매년 열려 온 이 워크숍은 교육품질 측면에서나 참여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실무자 뿐 아니라, 참여기관 도서관의 의사결정자 및 각 대학 구매과/기획과/관리과 등의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자저널의 필요성과 현황 등을 교육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각 기관 실무자가 전자저널 업무와 컨소시엄 참여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지원을 확보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학술 및 연구기관의 영향력 있는 인사, 즉 대학의 처장급 고위 경영진이나 연구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KESLI 컨소시엄의 역할과 혜택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KESLI를 이끌어 가는 실무자들과 조건검토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자료분석력과 협상력 강화 교육도 계획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 3. 장기적 변화주도 전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 학술정보기관

과 도서관 관련 단체는 전자저널을 포함한 학술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화 주도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개별 도서관이나 컨소시엄이 독자적으로 날로 상승하는 전자저널 가격 문제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하기 보다는 더 넓은 차원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하면서 학술전문정보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해외 학술정보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국제적 추세에 협력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 전략을 펼쳐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대학 및 많은 연구도서관이 공공예산으로 운영되거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전자자원을 구매하고 있어 매년 해외 정보자원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되는 공공자금의 총량이 상당한 양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에 비하여 정책적 지원체계는 빈약한 실정이다. 사실상 KESLI 등의 컨소시엄이 출범하기 까지 전자저널을 포함한 해외학술자원 수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도서관에 모든 책임이 지워져 있었으며, KESLI는 해외 전자저널 구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대학 도서관<sup>5)</sup>이 주도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그러나 KESLI가 출범할 때 벤치마킹의 사례로 삼은 NESLI<sup>2)</sup>를 지원하는 영국의 JISC의



〈그림 5〉 장기적 변화 주도 전략

5) KESLI는 한 대학, 즉 한국과학기술원(KAIST : Korean Academic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도서관의 주도로 시작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에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KISTI로 그 운영의 주체가 이전되었다.

최근 활동을 살펴보면 전자저널 문제는 이미 한 도서관이나 컨소시엄 차원을 넘어 더 높은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를 실행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동향주지, 연구와 실험, 그리고 홍보와 인식제고, 법제 기반 구축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장기적 변화주도 전략의 열개는 <그림 5>에 보이는 바와 같다.

### 3.1 동향주지

앞서 단기 대응전략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전혜영, 박수희 2008)에서는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여러 번 지적되었다. 출판사 통·폐합 정보와 오픈 액세스로 접근이 공개되어 있는 양질의 자원 정보는 당장의 전자저널 실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벤치마킹 조사의 결과(김성진, 정은경, 한민혜 2008)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술정보시장에서 도서관이 겪는 약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 도서관, 컨소시엄 및 국가기구와 국제기구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와 시도에 관한 정보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국내 학술정보 커뮤니티, 즉 도서관 운영자와 실무자, 컨소시엄 실무자를 포함한 다양

한 관련 정책 결정자 그룹, 그리고 전자저널의 최종수요자인 학자와 연구자 그룹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주도 전략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보의 공유는 공감대의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SPARC나 JISC, ICOLC 등 주요 기관/단체의 웹사이트와 전자저널 라이선싱 관련 주요 메일링리스트 및 토론 그룹을 모니터링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속보, 번역, 분석, 시사점 도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는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의 정보채널을 구축하여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첫 번째는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KESLI 총회와 포럼을, 공급자 조건을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재의 형식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NDSL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여 참여기관 실무자가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은 KESLI 미래 운영모형을 위한 추진체계의 근간이 될 참여기관 조직화 전략의 견인차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최종수요자나 정책 결정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모아 이들의 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형태로 패키지화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최종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날장자



료<sup>6)</sup>나 참여기관이나 NDSL 홈페이지의 팝업 창을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로 기획한 간담회나 세미나 등 이들을 위한 교육·홍보 기회를 설계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 3.2 연구 및 실험

전자저널을 둘러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긴장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은 결국 라이선스 가격책정 및 인상에서 발생한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시장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가는 FGI에 참여한 전자저널 실무자와 공급자 간에 가장 큰 의견의 차이를 유발한 쟁점사항이었다. 공급자 측에서는 외국의 본사 담당자들이 한국시장에 대해 큰 기대치를 갖고 있어, OECD 경제수준 등의 수치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수요자 측에서는 서구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시장 비교 연구나 이용자 특성 비교 연구를 통해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외국에서 수행된 다양한 전자저널 이용자 연구를, 동일 조건에서 한국의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복제(replication) 연구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구나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안된 FTE 기반 구

독기관 범주구분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 연구를 한중일 3국 등 유사한 조건을 가진 국제협력 연구로 수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KESLI가 주체가 되어 전자저널 관련 연구공모사업을 기획하여 연구비와 함께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이러한 연구가 다각도에서 수행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의 특성에 대한 집합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단기적 대응전략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격모형 시뮬레이션 도구를 개발하여 주제별 패키지나 기관유형에 따라 구분한 참여기관 그룹을 테스트베드로 해서 다양한 가격모형을 실험하는 연구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급자들은 전자저널의 이용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기관별, 또는 컨소시엄 단위에서 전자저널에 대한 접근 제공을 통해 얻어진 편익을 밝힐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서 도서관 예산을 배당하는 모기관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급자를 상대로 가격인하만을 고집하지 말고 예산배당자를 설득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자저널 구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6) 부록 1의 IV-1은 미국의 ARL과 SPARC가 지원하는 CreateChange(<http://createchange.org>)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다. CreateChange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자와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캠페인이자 웹사이트이다.

### 3.3 홍보와 인식제고

양질의 학술전문정보를 확보하여 학술연구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 학술전문정보를 입수하는 데에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어 왔고 그 국가적 투자의 총량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해외 전자저널 입수 문제를 도서관 공동체만이 끌어안고 가려하는 것은 현명한 접근방식이 아니다.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가진 도서관계가 전자저널 라이선스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전 국민의 관심을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여 더 넓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학술정보를 포함한 지식정보자원의 중요성과 지식수입국으로서의 현황 및 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해외 학술전문정보의 입수를 위한 컨소시엄 뿐 아니라 NDAC 등 장기적 보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전자저널의 최종수요자, 즉 대학과 연구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학술 및 과학기술, 그리고 의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현안과 과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저명한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세력 화함으로써, 이들을 도서관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이다.

### 3.4 법제 기반 마련

우리나라에서 해외 학술정보 라이선스 구매를 위한 컨소시엄이 시작된 이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경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점검하여 정비하기 위한 시도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법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대부분의 라이선스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국제법을 따른다’는 모호한 원칙이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활동을 규제하는 우리 법제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립대학, 정부기관, 국책 연구소 도서관의 입장에서 라이선스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약의 사태로부터 도서관과 실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도서관을 위해서도 컨소시엄 차원에서 세무신고나 외환관리법 등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현재 대학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장서평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자저널 구독종수를 유지하기 위해 번들 구매에 묶여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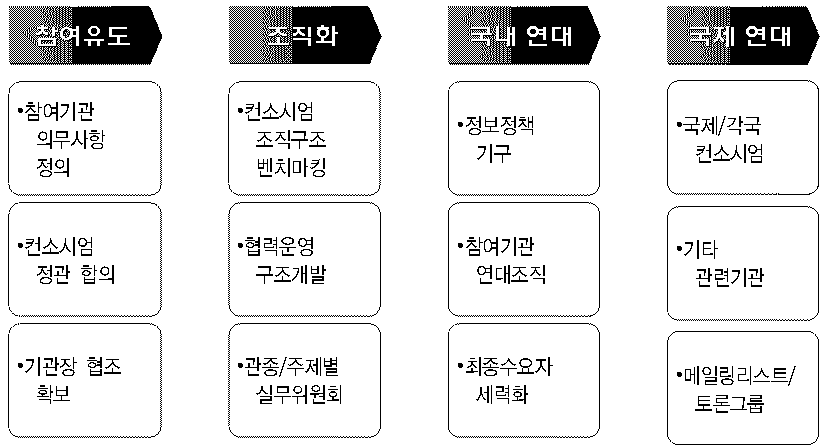
요가 있다. 주제별 패키지나 도서관 맞춤형 패키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도서관을 위해서는 전자저널이나 해외 전자정보의 구독종수에 대한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도서관의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한편, 학술진흥재단이나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전자저널을 포함한 해외전자정보자원의 입수와 활용에 관련된 관련 기구의 주요 사업 아젠다에 전자저널 라이선싱 문제를 편입시키는 전략도 근본적인 변화주도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 4. 추진체계 정비

현재의 KESLI 인력과 자원으로는 여기서

제안하는 장기 변화주도 전략이나 단기 대응전략은 커녕 현재 수준의 서비스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최근 인력과 조직이 축소된<sup>7)</sup> KESLI로서는 인적 자원과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 전략은 고사하고 기존에 해오던 활동조차 참여기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GI에 참여한 전자저널 실무자들이 KESLI 조직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인 개선사항으로 꼽은 것은 조직위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학술지는 그 구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안정적인 조직위상을 기반으로 변함없는 추진력을 발휘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상적인 컨소시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충



〈그림 6〉 미래형 컨소시엄 추진체계

7) 최근 KISTI로 주관기관이 이전되면서 KESLI 인력과 조직규모가 축소되었다. 2007년 12월 현재 KESLI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정규직 2명과 임시직 1명에 그쳐, KESLI 포럼에서 연구진을 만난 한 참여기관 대표는 '2.5명'이라는 표현으로 그 인력규모의 영세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는 것만큼이나 전자저널 관련 쟁점사항을 연구하고 전략을 개발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조직 위상을 강화해서든, 참여기관 실무자들이 컨소시엄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회원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각 기관장의 합의를 도출하든,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그림 6>에 보이는 바와 같은 참여기관 조직화, 국내 연대, 국제 연대의 세 가지 전략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진체제는 앞에서 제안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추진체계 정비야말로 KESLI를 미래형 컨소시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 4.1 참여기관이 주체가 되는 컨소시엄

컨소시엄(consortium)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a group of people or firms who have agr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즉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일군의 사람들이나 회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전자저널 라이선스를 위한 것이든, 자원 공유를 위한 것이든 도서관 컨소시엄은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일군의 도서관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전자저널 도입 초기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시

작된 KESLI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서관이나 실무자는 KESLI로부터 혜택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위하여 무언가 내놓기도 해야 한다는 점은 심각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ESLI의 정체성이 화두가 되고 그 미래를 염려하기 위해 모인 자리<sup>8)</sup>에서조차 대부분의 참여기관 대표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디서 어떤 강력한 지원을 더 받을 것인가를 더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GI에서도 KESLI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KESLI를 더 강력한 협의체로 만들기 위해서 참여기관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다 더 자주 다루어졌다. 그러나 KESLI의 미래를 보장하는 열쇠는 참여기관이 적절한 의무와 권한을 나누고 컨소시엄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데 있다. 따라서 참여기관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어내고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물론 전문직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이나 자원봉사 정신에 호소하는 접근방식만으로 현장 사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담당자 교체가 잦고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학도서관<sup>9)</sup> 실무자의 경우, 도서관 내부의 다른 부서 직원과의

8) 2007년 4월 18일에서 19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KESLI 전자정보 포럼은 ‘KESLI, 우리의 미래는’ 주제로 소그룹 토의 및 토의 결과 전체 공유 세션을 가졌다(KESLI 2007).

9) FGI에 참여한 한 연구소 도서관 사서는 ‘대학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짐은 더 무거운데 문제의식은 없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근무 시간 중 외부 회의에 참석하거나 내부적으로 배정된 업무 이외의 일을 떠맡기 어려운 사정일 것이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컨소시엄을 통해 전자저널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양은 많지만 KESLI 컨소시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상대적으로 실무자의 재량권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연구소 도서관의 입장에서도 연구소 내 고위경영진의 이해와 지원이 없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컨소시엄 운영에 참여기관이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컨소시엄 활동을 도서관과 무관한 일로 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째는 KESLI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전자저널 담당자 즉 라이선스 담당자와 전자저널 이용 담당자 등이 컨소시엄 관련 업무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정관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도 이 정관에 동의해야만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가입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정관에는 소위원회 활동 등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이외에도 컨소시엄 차원의 이용패턴 분석을 위한 데이터나 NDSL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기타 의무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사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컨소시엄 업무가 즉 그 도서관 내부의 업무만큼이나 중요한 업무라는 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참여기관 기관장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제안한 정관에 반드시 기관장이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하여 참여기관 담당자가 자유롭게 컨소시엄 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KESLI는 정보전문가 세미나나 전자정보포럼 등 전자저널 담당자를 만나고 교육하는 일에는 열의를 기울여 왔지만, 전자저널 담당자의 근태와 업무성과를 감독하는 상사인 대학이나 연구도서관의 중간관리자나 경영자를 대상으로 전자저널 업무와 컨소시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서직 내부에서조차 전자저널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컨소시엄의 발전을 꾀할 수 없을 것이다. 앞 절에서 제안한 홍보와 인식제고 전략의 가장 우선적인 타겟으로 참여기관의 의사결정자나 예산배당자를 설정하는 것도 컨소시엄의 강력한 지지 세력을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 4.2 참여기관 조직화

아무리 많은 인력이 KESLI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한다면 오합지졸의 격이 될 것이다. 참여기관과 실무자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컨소시엄의 다양한 조직구조 및 예산출처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기반 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참여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양한 이해를 가진 참여기관이 KESLI를 협력운영(governance)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의 첫 돌을 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도서관 컨소시엄인 EPIC(Electronic Purchasing In Collaboration)은 그 조직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이 컨소시엄 본부 격인 선도국(Lead Agency)이 되고, 참여기관 대표로 구성된 실무단(Working Groups) 및 관리단(EPIC Governance Group; EGG)이 부문별 실무를 분담하고 있다. 실무단은 협상팀과 제품 평가단(Product Evaluation Group)으로 구성되어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검토,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EGG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관리단은 대규모 공공, 중소규모 공공, 국립, 전문대, 학교, 전문, 대학 등의 실무자 중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하며, 2년을 임기로 하여 관종별 그룹의 이해를 대변하여 컨소시엄의 운영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FGI에서도 관종별 또는 주제별 단위의 소위원회, 그리고 '컨소시엄 연구 전담반'과 '실무위원회' 등 조직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또 이 연구가 수행한 FGI와 유사한 형태로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기관 사이의 소모임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물론 소그룹 단위로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다양한 가격모형이나 기관규모 산정방식을 놓고 다양한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

이다. 그러나 지극히 어려운 학습의 과정을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상이한 이해를 가진 기관 간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경험을 축적해야만 KESLI가 미래형 컨소시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4.3 국내연대

도서관 공동체에서조차 소수의 전자저널 담당사서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자저널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국내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 전자저널이나 연구전문도서관에 관련을 갖는 정보정책기구와 연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사실상 대학 및 전문도서관에서 가장 큰 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해외 전자저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과,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일단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콘텐츠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정부부서가 도서관 정보정책 기능을 담당하게 되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전 국민이 양질의 전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아젠다로 삼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전자저널 접근확대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자저널 컨소시엄은 대규모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기업이나 벤처 기업 직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전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한편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등 KESLI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다양한 협의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특히 참여기관 의사결정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훌륭한 전략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통해 참여기관 담당자가 컨소시엄 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조직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술진흥재단 등 학술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양한 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학술연구를 진흥한다는 기관 사명과 전자저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한다는 컨소시엄의 존재의의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학술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전자저널의 최종수요자인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저널 라이선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CreateChange와 같이 학술연구자가 하나의 이해당사자 집단으로 세력화하도록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협력한다면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4.4 국제협력

KESLI 컨소시엄과 국내 도서관이 전자저널과 관련하여 겪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각국 도서관계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자저널 라이선싱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국제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게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설득논리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논의와 시도에 참여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인 국제적 협력 내용으로는 국제컨소시엄연합인 ICOLC 등의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공동 대응하는 일에서부터 NESLI나 CRKN 등 각국 컨소시엄과 정보를 교환하는 일, 참여기관을 대표하여 제3자 아카이브인 Portic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도서관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자저널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SPARC나 IAA 등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결성된 도서관 관련기구에 힘을 보태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 5. 결론

전자저널은 예산 및 장서구성의 비중 측면에서 대학 및 연구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자원

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저널에 대한 접근 확보를 위한 라이선싱 업무를 지원하는 컨소시엄이야말로 대학 및 연구도서관 이용자, 즉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전문가 집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KESLI에 초점을 두어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미래 운영모형을 제안하였으나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은 현존하거나 미래에 출현할 모든 컨소시엄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안하는 전략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책임이 컨소시엄 운영주체에만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 책임은 모든 참여기관, 관종별 도서관 협의회 등 도서관 협력체, 도서관 정보정책기구, 학술정보 생산자이자 수요자이기도 한 학술연구자 개인 및 단체 등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전자저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와 해결 의지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협력하여 분담할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성진, 정은경, 한민혜, 2008,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둘러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쟁점과 대응동향. 『정보관리연구』, 39 (1): 게재 예정.

이소연 등, 2007, 『KESLI 효율성 분석을 통한

미래형 컨소시엄 운영모형 개발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보고 K-07-IP-01-06P-7,

전혜영, 박수희, 2008,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연구. 『정보관리연구』, 39 (1): 게재예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대학도서관 해외 전자정보 구독 현황 및 수요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SLI, 2007, KESLI 전자정보 포럼 자료집, 『KESLI 전자정보 포럼』, 2007년 4월 18~19일. [원주: 오코밸리].

CRKN, 2006, CRKN Model License Agreement, [cited 2007.10.30].  
 <<http://researchknowledge.ca/en/programs/documents/CRKNModelLicenseAgreementJan06.pdf>>.

ICOLC, 1998, Guidelines for Statistical Measures of Usage of Web-based Indexed, Abstracted, and Full Text Resources, [cited 2007.10.30].  
 <<http://www.library.yale.edu/consortia/webstats.html>>.

ICOLC, 2006, Revised Guidelines for Statistical Measures of Usage of Web-based Information Resources, [cited 2007.10.30].  
 <<http://www.library.yale.edu/consortia/webstats06.htm>>.

JISC, 2005, A Guide to the Model NESLI2



- Licence for Journals: Making Effective Use of Online Resources, [cited 2007,10,30], [〈http://www.nesli2.ac.uk/NESLi2\\_Model\\_Licence\\_guide\\_v1.pdf〉](http://www.nesli2.ac.uk/NESLi2_Model_Licence_guide_v1.pdf).
- JISC, 2005, NESLi2 Analysis of Usage Statistics: Summary Report, [cited 2007,10,30], [〈http://www.jisc.ac.uk/uploaded\\_documents/nesli2\\_usstudy.pdf〉](http://www.jisc.ac.uk/uploaded_documents/nesli2_usstudy.pdf).
- JISC, 2007, A Guide to JISC Licenses, [cited 2007,10,30], [〈http://www.jisc-collections.ac.uk/model\\_licence/coll\\_guide\\_jiscmodel.aspx〉](http://www.jisc-collections.ac.uk/model_licence/coll_guide_jiscmodel.aspx).
- NERL, 2006, Generic License Agreement, [cited 2007,10,30], [〈http://www.library.yale.edu/NERLpublic/NERLGenericLicRev081006.pdf〉](http://www.library.yale.edu/NERLpublic/NERLGenericLicRev081006.pdf).
- NERL, 2006, Principles for Electronic Journal Licenses, [cited 2007,10,30], [〈www.library.yale.edu/NERLpublic/EJrnlPrinciples.html〉](http://www.library.yale.edu/NERLpublic/EJrnlPrinciples.html).
- NESLi2, 2007, Model License for Journals, [cited 2007,10,30], [〈http://www.nesli2.ac.uk/ModelNESLi2LicenceMay07final.doc〉](http://www.nesli2.ac.uk/ModelNESLi2LicenceMay07final.doc).
- Rightscom, 2005, Business Models for Journal Content: Final Report, [cited 2007,10,30], [〈http://www.jisc.ac.uk/uploaded\\_documents/JBM.pdf〉](http://www.jisc.ac.uk/uploaded_documents/JBM.pdf).